

< 11주 : 국토개발과 환경평가 >

## 1.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 20세기 후반부 반세기 역사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개발과 건설에 매진한 시기. 그러나 경제와 건설에 치우친 개발일변도의 정책수행은 수용용량이 제한된 국토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난개발, 환경훼손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
- 21세기 들어 경제성장,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숙 등과 함께 자연환경, 생태계 등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개발사업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국가적 이슈로 등장
- 이러한 갈등사례는 우리에게 국토환경 보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보전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 즉,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도 국토자원을 풍족하게 이용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체계’의 확립이 최대한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그간의 국토관리 패러다임을 대체
- 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각종 환경부하에 대하여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인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기획·입안단계에서 국토의 환경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평가 제도를 필요로 함
-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전략환경평가 제도 등이 있음

### 1.1 환경영향평가제도

#### ■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
-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 ■ 제도 도입과 변천과정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하위규정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됨
- 1990년 환경법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집행적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 입법상의 문제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
- 1999년 12월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 등 4대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2003년 12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평가대상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를 미리 결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2005년 5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평가서 작성 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시 의견수렴을 적절하게 한 경우 평가단계에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와의 연계를 강화함
- 이후 2008년 3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내용 중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구영향평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이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

####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positive list)
-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토석 등의 채취와 같은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

####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

-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사전 검토한 후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항만건설사업 등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협의기관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 취합, 평가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거쳐 협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구축 · 운영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검토 ·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 평가서 및 협의내용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
- 동 시스템에서는 평가협의 진행상황, 환경질 측정자료,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생태자연도 등 각종 지리정보, 평가서원문 및 협의내용 등을 제공. 평가서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2,506건을 DB로 구축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업자 등이 공개에 동의한 958건에 대하여 평가서원문을 일반인에게 공개

## 1.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 제도의 의의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 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장애 당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보전대책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
  - 양 제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 검토 ·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줄이기 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계획과 환경 민감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음

- 즉,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위주로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적정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계획검토·수립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사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2006년 6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수를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여 입지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체제로 개편함으로써 환경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강화됨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 및 협의대상

-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의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서 규정
- 도로, 댐, 철도 등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을 포함하여 90개 행정계획(시행령 제7조 별표2)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9개 용도지역내에서의 일정규모(5천~1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
- 2006년 6월 전략환경평가체제로 확대·개편시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댐건설장기종합계획 등 그간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어왔던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이 새롭게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됨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보

-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02.12) 및 시행령(‘03.6)을 개정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07.5)
- 2005년 6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전공사에 대한 원상복구 및

허가취소 요청 등의 조치내용을 명문화하고 사전공사 유형별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 사전입지상담제도 도입('05.9월, 상담지침 마련·시달)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등 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업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2.3 전략환경평가제도

### ■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거의 사업이나 행위(project or action)에 한정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적시성과 포괄성 등을 위해 결과적으로는 사업이나 행위를 유발하는 정책, 기획, 계획, 규정, 규칙이나 법령 등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남. 사업이나 행위가 아닌 정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라고 정의
- 전략이라는 용어는 사업이나 행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과적인 저감대책의 강구, 사업의 포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안의 평가 및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전술(tactics)에 대한 상대적 개념

### ■ 전략환경평가의 목적

- 전략환경평가는 브룬트란드위원회의 소위 '1990년대의 주요 제도적 도전'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 이런 관점에서 전략환경평가는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환경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 인지적, 통합적 의사결정을 촉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동기는 절차적, 실질적인 추세변화와 필요성 때문
- 종종 하향식 전략 또는 상향식 전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들의 목적은 (1)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 환경영향평가는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구로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에 대한 주요 대안이나 방향이 결정된 후인 의사결정과정의 제일 마지막에 실시.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환경적 적합성 여부나 형태, 사

업장소의 선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사업의 시행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피해가 덜 가게 시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좁아짐

-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다룸으로써, 전략환경평가는 다음에 이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전략환경평가란 정책이나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예견해서 방지하는 사전 행동적 도구. 주요 목적은 대규모, 누적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 예를 들면, 토지이용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포함할 수 있고, 도로건설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

#### ■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입안 초기단계에서 대안비교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전략환경평가체제를 도입
- 2006년 6월 개발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단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SEA)의 시행을 통해 제도개발계획의 구상초기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대안에 대한 환경성을 집중 검토하게 되고, 개발사업 실시단계에서부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가능
- 전략환경평가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선진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 전략환경평가의 장래방향

- 전략환경평가는 단순히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전략환경평가의 장래 방향은 두 갈래 길을 따



를 수 있음. 하나는 전략환경평가를 정책과 계획수립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략환경평가를 지속개발 평가나 통합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 2. 개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2.1 발달과정과 이론적 구조

#### ■ 발달과정

- 비용-편익분석은 미연방이 1936년 「홍수방지법」(The Flood Control Act of 1936)을 제정, “편익이 누구에게 귀착되던 편익은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되기 시작. 그러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일관성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미 연방정부의 공병단(Army Corp. of Engineers) 등 각 기구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
- 그러다가 1950년 연방유역정부간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River Basin Committee)가 녹색책자(Green Book)로 알려진 “강유역사업의 경제성분석 실무 지침서”(Proposed Practices for Economic Analysis of River Basin Projects)를 출간하면서 공공사업과 관련된 정부기구들에게 통일된 최적사례지침을 제시함.<sup>1)</sup> 이후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의 공공사업은 물론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 이론적 구조

-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은 잠재적 파레토 향상(potential pareto improvement)이라는 개념에 기초. 이는 어떤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복지 향상이 잃는 자의 복지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려면 정책으로 인한 총편익의 화폐가치가 총비용의 화폐가치를 초과해야만 함
- 환경정책분석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전제는 환경오염이 인간의

1) Steven C. Hackett. 2001.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conomics : Theory, Policy, and the Sustainable Society. Armonk, New York; M.E. Sharpe. p.122.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지만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또한 인간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희소자원의 소비라는 것

- 그러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행위는 환경개선에 따른 이익이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 만일 전자가 후자보다 적다면 환경개선행위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
- 그런데 환경재는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환경성은 간접적이고 무형적이기 때문에 유무형의 환경개선 편익 및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님. 그리고 계량적 기법인 비용·편익분석은 비계량적인 환경요소를 계량적, 가측적 요소로 취급함으로써 여타 경제적 항목의 가치화에 비해 환경요소의 가치를 과소평가 할 우려도 있음

## 2.2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측정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인식하고 예측하며 추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은 시장가격을 그 추정의 근거로 삼음
- 그런데 이때 인식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편익은 소비자의 잉여를 추정의 이론적인 근거로 삼음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특정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상실하게 되는 차선의 타 용도에서 발생하는 효용. 그리고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는 효용을 금전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각 개인이 어떤 재화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즉 지불용의(willingness-to-pay)로 추정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활용되는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 즉 비용과 편익은 완전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가격으로 환산하여 측정. 환경경쟁시장 하에서는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이나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
- 그런데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불완전경쟁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많은 경우 비용과 편익은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변하는 잠재가격(shadow price)으로 계산됨

## 2.3. 환경문제와 비용·편익분석

### ■ 환경개선의 편익

- 일반적인 소비자의 효용은 시장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얻어짐. 즉,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 그런데 환경오염이 있을 경우 이러한 편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됨. 그러므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의 편익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화폐적 보상(monetary compensation), 즉 환경피해의 반사적 가치로 규정할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오염배출로 인한 인체 피해, 재산의 피해, 쾌적성 상실,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과 파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오염발생 이전의 복지 상태로 환원하는 경제적 보상의 시각에서 인식

### ■ 환경개선사업의 비용

- 환경개선사업의 비용에는 오염원이 지불하는 저감비용이나 정부의 감시·감독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뿐 아니라 환경정책이 유발한 기타 경제적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간접비용까지도 환경정책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환경과 관련된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직접비용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재분류. 직접비용은 설치비와 운영비로 분류. 설치비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자본재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
- 설치비는 일종의 고정비용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어서 기업의 생산량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변하여도 설치비 자체는 변하지 않음
- 운영비는 이미 설치된 오염저감시설을 작동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에는 재료비·부품비·인건비·연료비 등이 포함

### ■ 환경서비스와 가치측정

- 환경자원의 보전가치에는 본질적으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두 가지 요소가 포함.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 등 많은 자원을 직접 생산·제공하여 우리의 후생수준을 높여줌. 뿐만 아니라 보전된 자연자원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즐기므로 인간의 만족도를 높임
- 그러므로 환경의 가치는 그 환경이 우리의 후생(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 즉 실재적인 사용가치에 의해 판단. 이렇게 인식된 자연자원의 가치를 사용자 가치라 함
- 그런데 자연자원은 실재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들도 자연자

원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인식. 이같이 인식된 가치를 선택유보가치라 함. 어떤 자연자원의 장래 이용자가 생애 중 동 자연자원을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보된 선택에 따른 지불용의가 있다는 것

- 이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순수존재가치. 어떤 진귀한 자연자원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인간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전에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존재가치가 이용가치에 못지 않는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 가치측정기법

-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은 크게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으로 구분
- 간접 방법은 재화의 가치가 시장에서 재화의 구매를 통해 나타난 선호행위로부터 환경의 가치를 분리해 내는 방법. 즉,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인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에 대한 가상적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소비자 잉여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이 방법에는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속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등이 있음
- 여행비용법은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의 여행비용 속에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자의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특정 지역의 관광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여행비용법은 여행에 소요된 직접적인 금전 비용과 시간 비용에 따라 방문횟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본모델로 함. 다른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여행비용이 증가하면 관광지의 방문횟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여행비용과 방문횟수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
- 속성가격법은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 속성가격법에서는 주택이나 직업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의 가격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 이는 환경재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과 같은 대체시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 직접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상적 시장을 제공하고 가상적 상황에서 응답자로부터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여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있으며, 각 개인이 환경재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갖는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여행비용법이나 속성가격법과 같은 간접평가방법과는 달리 환경재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물어보아서 구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효용을 직접 평가할 수 있음